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정보제공 동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보도 주요내용〉

8.19.(월) 한국경제는 「차주에 BMS 정보제공 동의 의무화.. ‘전기차 포비아’ 대책 추진」에서 정부가 전기차 안전 관계부처 회의에서 차주의 BMS 정보 제공 동의를 필수화하는 방안, BMS 연구개발 지원 등을 논의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BMS 정보제공 동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BMS 기술은 전기차 안전성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인 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전기차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통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담당 부서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책임자	과 장	이영호	(044-203-4320)
		담당자	서기관	김효선	(044-203-4326)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은정	(044-201-3827)
		담당자	사무관	서혜린	(044-201-3846)